"檢 칼날 지도부 향하나" 민주 바짝 긴장

■ 한명숙-곽영욱 만남 정세균 배석 … 파장 촉각

정대표 "짜맞추기 수사… 문제될 내용 없어" 비판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던 자리에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동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짜맞추기 수사" "상황 호도를 위한 물타기 시도"라고 반발하면서도 검찰의 칼날이 한 전 총리를 지나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인 당 대표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임을 앞두고 연말도 되고 해서 퇴임인사차 식사 한번 했던 자리였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던 것"이라며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곽 전 사장과) 아는 사이긴 했지만, 당시 임기 만료를 8일 앞두고 있었고 이미 후임 장관도 발표된 상태였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인사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일부 신문의)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게 많다"며 "하나하나 얘기하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 게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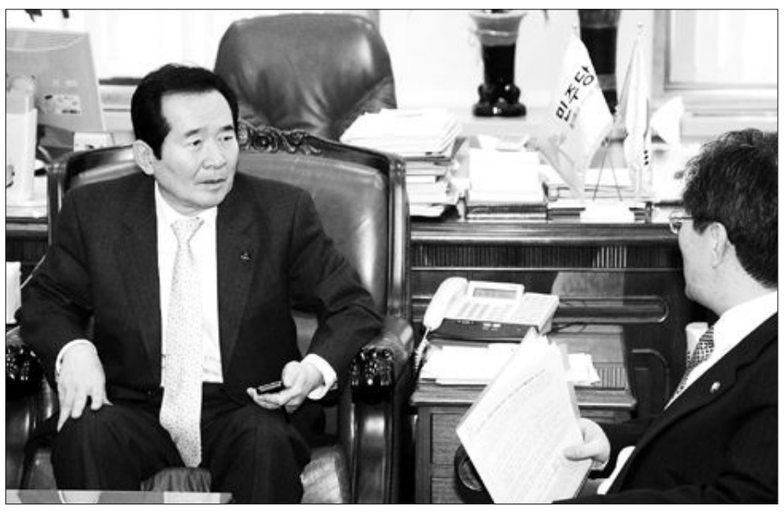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검찰 수사를 성토했지만 일부에서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 대표는 퇴임을 앞두고 총리 공관 오찬에 참석한 적이 있으며 이 오찬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발언은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이것이 알파이고 오메가"라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역시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당직자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지 모를 정도"라며 "검찰 수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파장이 확산하는 것이 야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걱정했다.

이에 앞서 일부 신문은 곽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한 전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 대표와 강동석(71)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갔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하기에 앞서 강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고, 강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을 도와주자는 덕담이 오갔지만 돈 문제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명숙 공대위의 양정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8일 한 전 총리 검찰 수사에 입회했던 우리 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곽영욱 씨는 현재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궁박하면서 뭔가에 쫓기는 듯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일 검찰에 의해 억지 대면이 이뤄지고 난 후 조사가 끝나갈 무렵 곽 씨는 여러 사람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검사에게 '검사님,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기 앞서 참모진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파고' 극복 할까

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 4대강 예산 삭감 평행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1일 오는 29~31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닷새째 국회 예결위 회의장 농성을 이어갔고 이날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예산안을 자체 심의하는 독자 행보를 계속했다.

한 가닥 희망은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함에 따라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 즉,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한 '총론'에는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삭감 내용과 규모 등 '각론'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 중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 등에 대해 민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업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삭감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인 데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4자회담 제안도 민주당의 거부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주당은 예결위 점거 해산의 전제조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3자 회담 수락을 촉구하고 있고, 이에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3자 회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주 말까지 현 여야간 대치상황을 타개할 계기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오는 28~29일 예결위, 30~3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여야 모두 파국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처이전 백지화·기업 인센티브 포함"

'세종시 대안' 내달 11일 발표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을 위한 최종 대안이 내달 11일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달 11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최종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는 원안에 규정된 정부부처(9부2처2청) 이전 백지화 및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건의, 기업 등 입주시설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및 토지 저가 공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데 따른 '세종시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입주기업 명단은 정부에서 일괄 발표하지 않고 인센티브 내용과 세종시법 개정 방향이 제시되면 해당기업들이 투자 내용과 규모를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대안 발표는 송석구 민관합동위 민간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세종시 대안 공식 발표에 앞서 정 총리는 이 대통령을 만나 직접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대안 논의기구인 민관합동위는 대안 발표에 앞서 남은 기간 소위원회를 구성, 정부부처 이전 여부와 기업유치 계획, 입주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핵심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기구인 세종시기획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내달 11일 세종시 발전방안(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향후 논의과정과 정부부처 이전 범위, 과학벨트 유치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자회담 애걸복걸 추하다"

박주선, 예산 대응 자세 비판

차기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가 유력한 박주선 최고위원이 당 최고지도부의 예산 정국 대응 태세를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3자회담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과 대책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때가 됐고, 애걸복걸하는 건 매우 추한 모습"이라며 "안 만나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뭘 할 것이며 만나주겠다고 확약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자고 애걸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뭐로 비치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또 "여당대표가 야당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고 더 나가서 여야 당대표가 대통령을 포함해 3자회담 하자고 요청하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거부되는 현실은 이미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는 완전히 권위가 무시당하는 정치암흑기에 돌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는데 전제조건을 얘기하면서 만나주겠다 안 만나주겠다고 하는 코미디가 민주정부하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히 제도상으로 갖춰진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9일 국토위에서 4대강 예산이 기습 처리된 것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가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도 예결위는 정상 가동키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위법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